|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| 보 도 자 료 | | |
|---|---|---|---|
| 보도일시 | 배포시 | 배포일시 | 2017. 6. 1.(목) |
| 담당과장 | 이도영(02-397-1321) | 담당자 | 허윤선 서기관(02-397-1322) |

# 제목: 「일자리 100일 계획」 발표

**<요약>**

1.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월1일 10시 30분 일자리위원회 사무실(창성동 정부청사 별관)에서 '일자리 100일 계획'을 발표했다.

○ 이 부위원장은 "오늘 발표하는 '일자리 100일 계획'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「일자리 100일 플랜」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(5.10~8.17)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"이라고 밝혔다.

○ 오늘 발표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,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,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,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,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, 중소기업청 정윤모 차장이 배석했다.

2. **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** :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, 경제·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"성장-일자리-분배"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

3. **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'5년 로드맵' 마련**



○ 교육, 노동,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·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

- 고용영향평가 강화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, 세제개편,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,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

○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,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

**4.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**

○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 수행

- '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' 수립,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2천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,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민간부문 : 경제·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

- 규제 : 최소·자율 규제,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

- 중소·창업기업 지원 : 중소벤처기업부 신설,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, 금융 세제지원 확대,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, 개인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,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'삼세번 재기지원펀드' 조성

-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마련

- 청년 여성 중장년 : 청년구직수당 신설(추경), 육아휴직급여 인상(추경),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,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(추경),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

- 광주형 모델 성공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,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**5. 일자리 질 제고**

○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」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」 마련

-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,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 추진

○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(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)

-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'동일가치노동·동일임금' 원칙 적용

-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'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'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

-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

○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→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,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



# 「일자리 100일 계획」 추진 방향

◇ **일자리 100일 계획**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「일자리 100일 플랜」 **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**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**취임후 100일 동안(5.10~8.17)에 추진**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

## 1. 일자리 상황 진단

□ **(단기적)**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**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**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○ ①제조업 등 **양질의 일자리*가** 지속 **감소**하고, ②**임금수준이 정체****된 가운데 **저임금 근로자도 확대**

* 취업자증감('17.1~4, 전년비, 만명) : (서비스) 35.9, (건설) 13.9, (제조업) △10.0
** 금융위기전후 실질임금 상승률(%): (전 8년평균) 4.1, (후 8년평균) 1.6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③**OECD 최장수준의 근로시간**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, **최저임금 미준수**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

○ ④**정규직-비정규직*, 대기업-중소기업**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, ⑤**청년**·여성·중장년**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

*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.5%,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
** **에코붐세대**('91~'96년생, 2차 베이비부머 자녀)의 **노동시장 본격 진입**으로 새정부 5년은 청년 고용여건이 **가장 어려운 시기**로 예상

□ **(중장기적) 4차 산업혁명** 도래로 산업·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**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**해 나가야함

○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**승자독식이 심화**되고 AI, 로봇에 의해 **중·저숙련 일자리가 대체**되면서 고용감소 예상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## 2.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

□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**정책의 최우선순위**에 두고, 경제·사회 시스템을 **고용친화적으로 전환**하여 **"성장-일자리-분배"의 선순환**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임

① **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**하고 경제·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

② **新성장동력 창출**과 **경제체질 개선**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제고

- **대기업과 기존 주력산업에 의존**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**성장의 기반을 다원화**

③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**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** 수행

- 보건, 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**공공부문 일자리**를 **확충**하고, **공공부문이** 비정규직의 **정규직 전환을 선도**

## 3. 「일자리 100일 계획」의 주요내용

◇ 취임후 100일내에 **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**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**추진 가능한 과제들**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**속도감 있게** 추진

○ 재원수반 과제들은 **추경** 등을 통해 **하반기부터** 바로 **시행**

○ **법개정이 필요한 과제**들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기 입법화

○ **중장기 과제**에 대해서는 **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**



### (1)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

□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**일자리위원회를 설치**하고 청와대에 **일자리수석실을 신설**하였음

○ **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**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최하여,

- **일자리위원회 시행세칙** 등을 상정하고 **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**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

□ **대통령 집무실**에 **일자리상황판***을 **설치**(5.24일)하여 고용상황을 **상시 모니터링**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함

* ① 일자리 상황(고용률·실업률 등), ② 일자리 창출(취업유발계수·취업자증감 등), ③ 일자리 질(임금격차, 임금상승률 등), ④ 경제지표(경제성장률, 투자, 소비 등)

□ 교육·노동·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**재정·세제·금융**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**좋은 일자리 창출** 중심으로 **재설계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주요 정책·예산사업 **고용영향평가 강화** 방안 마련(7월)

- **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** 마련(6월)

* ①직접일자리사업 통합, ②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, ③장려금제도 단순화, 취약계층 고용촉진·격차해소 집중, ④고용서비스·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

○ **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**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·고용 **세제지원제도 통합·재설계**(8월)

-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**조세감면 평가**에 **고용영향평가**를 단계적 도입

○ **근로감독관 증원**(추경예산안, +500명)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**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**

□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**일자리 민원 신문고** (www.jobs.go.kr)를 설치(6월초)

○ 국민들의 **일자리 고충을 해결**하고, 각계각층의 건의를 **새정부 일자리 정책**에 최대한 반영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## (2)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

◇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**민간 부문·기업의 역할**이 중요

○ 민간의 **자율성과 창의성**을 존중하면서 경제·사회의 틀과 체질을 **일자리 중심구조**로 전환하고 **중소기업·벤처창업 및 취약계층 지원**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

◇ **공공부문은 필수 공공서비스**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**마중물 역할** 수행

### < 공공부문 >

□ '17년 하반기 **공무원 1.2만명 추가채용**을 위해 선발·교육 등 관련비용을 **추경예산안에 반영**하고 **연내 선발**을 완료

○ **사회서비스 일자리**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, 노인일자리 등 **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**를 중심으로 **대폭 확충**(추경예산안 반영)

□ 향후 5년간 추진할 **「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」**을 수립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·확정(6월)

○ 공무원은 로드맵에 맞춰 **충정원령** 및 **수당규정** 등 개정

○ 공공기관의 경우, **'17년은 시급히 인력 확충**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**수시충원 협의**를 활용

- '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**기능점검·분석**과 연계하여 **'중기 인력운영계획('18~'22)'**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

* 중기인력운영 계획 마련(6월~12월)

○ 공공기관의 **「'17년 경영평가편람」에 일자리 관련 지표**를 강화(7월)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



### < 민간부문 >

□ 경제·사회의 틀과 체질을 **일자리 중심 구조**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의 **일자리 창출을 뒷받침**

○ **고용영향평가제**를 강화하여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, **근로시간을 단축**하여 생산성 제고 및 **일자리 창출**

○ **신산업**에 대해서는 **네거티브 규제 시스템**을 확대하여 '최소 규제-자율규제' 원칙을 적용

*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구성(6월)→규제대상 발굴 및 규제 개선(7월~)
(현행)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, 화장품 원료규제 등 일부 도입

□ 고용창출의 원천인 **중소·중견기업**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**혁신창업 생태계**를 구축하여 **창업을 활성화**

○ **중소벤처기업부**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·창업 지원 기능을 **전담 수행**(정기 국회)

○ **「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*」** 수립(8월)

* 예시)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(TIPS) 확대,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, 네거티브 규제심사 기구 확대개편 등

○ **중소기업과 창업기업**에 대한 **금융·세제지원** 확대방안 마련(8월)

- 중소기업·스타트업 **창업지원 자금 확대**, '**저금리, 이자유예, 무담보 신용대출**' 지원의 **창업금융 3종세트 도입**(기은, 9월 시행)

* 창업기업자금(융자, '17년) : 창업기업지원자금 1.53조원, 청년전용창업자금 0.12조원

-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**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**(지침 개정, 7월)

- **엔젤투자 소득공제** 적용대상*을 확대하고 **기술혁신형 중소·벤처기업 M&A**시 세액공제 요건** 완화(조특법 개정사항)

* (현행) 정책금융기관 우수기술평가 기업 → (개선) 민간금융기관 우수기술평가 기업 등 추가
** (현행) 합병대가 50% 이상을 현금성으로 지급할 것 등

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- **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**에 대한 세액감면율(現 5년간 50%) 상향 조정(조특법 개정사항)

-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**창업 중소기업**에 대한 **지방세 감면***을 확대(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하고 **수도권 창업 기업**중 **취득세**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** 확대(지방세법 개정사항)

* (현행)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중(취득세 75%, 재산세 50% (5년) 등)

** (현행 취득세율) 일반기업 4.4~8.0%, 벤처기업, 첨단업종, 도시형공장 창업기업 등 2.8~4.0%

□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위축 방지를 위해 **재기지원을 강화**

○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(8월)하여 **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**하고,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**시중은행 동참 유도**

* (현행) 정책금융기관별 연대보증 면제기준 상이(창업 3년~7년내, 우수기술기업 요건)
(개선) 창업후 5년내 모든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

-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내규를 개정(8월)하여 **개인**(대표자)에 대한 **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**를 **확대**

* ❶ (신·기보 단독채무) 기존에는 감면하지 않은 신·기보 기존 채무를 신·기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75% 감면
❷ (금융기관 다중채무)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절차 간소화(2→1개월) 및 심사요건 완화(現 일반금융회사 채무는 최대 60%,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75% 감면)

○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하여 3,000억원 규모의 **패자부활 '삼세번 재기지원펀드'**를 조성하여 재기기업 지원

* 운영방안 마련(8월) → 펀드모집 공고(9월) → 운영사 선정(10월) → 운영('18~)

○ **폐업한 영세 자영업자**가 **사업재개** 또는 **취업**하는 경우 **소액체납액을 면제**하는 제도를 한시 시행(조특법 개정안 반영, 8월)



□ 「**4차 산업혁명위원회**」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「**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***」을 마련

* 예시) 5G 상용망 및 IoT 전용망 조기구축, 의료 등 주요분야 빅데이터센터 설립,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, 스마트공장 보급확대, ICT 융합시장 법제·규제 개선 등

□ **청년·여성·중장년**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**맞춤형 고용지원**을 확대

○ **청년구직수당을 신설**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지급(추경예산안 반영)

- **청년내일채움공제**의 정부의 매칭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(추경예산안 반영)

* (지원대상) 5만명 → 6만명, (총적립금) 2년, 1200만원 → 2년, 1600만원

○ **육아휴직 급여**를 **인상***(추경예산안 반영)하고 **배우자 출산휴가 기간**(現 유급휴가 3일) **확대방안 마련**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

* (현행) 통상임금의 40% → (개선)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%

-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**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** 확대(중소 → 중소·중견기업), **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*** 조정(조특법 개정안 반영, 8월)

* (현행)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% 공제

- 「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**근무혁신 10대 제안***」을 실천하는 **범국민 캠페인 실시**

*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,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, 유연근무 확대, 건전한 회식문화 등

○ **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**을 확대(+3만개)하고 **참여수당**도 인상(추경예산안 반영)

- **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***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·확정(7월)

* 예시)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, 벤처인·청년예비창업자 멘토링 연계,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

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### <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>

□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**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**

○ **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**(광주형 모델) 확산 방안을 마련(8월)

*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

○ 고용생태계 개선을 위해 **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*** 및 **산업·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**** 마련, 일자리위원회 상정(8월)

* 예시) 시도별 지역 클러스터 조성계획 마련, 혁신산단 지정,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한 인상 등

**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 마련(11월) → 사업추진 지원('18년)

○ **수도권 소재 기업본사를 지방이전**시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세제지원 제도 개선(조특법 개정안 반영, 8월)

* (현행)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를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

□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 참여·협동·연대에 기반한 **사회적 경제 육성**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○ **「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*****」**을 **마련**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·확정(8월)

* 예시)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,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,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등

○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**사회적 경제법안***에 대한 **정부대안을 제출**하는 방안 검토(8월)

* ①사회적경제기본법, ②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, ③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



### [3] 일자리 질 높이기

□ **「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**(고용부 총괄)**」**를 가동하여 현장 실태 조사 후 **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*****」** 마련(8월)

* 상시·지속업무, 생명·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

○ 혼란·혼선 방지를 위해 **큰 틀에서 가이드라인**을 제시하되,

-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공공기관이 **노사 협의**를 바탕으로 **자율적**으로 추진

□ **민간부문**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**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**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

○ **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** 마련(8월)

- **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** 등을 통해 **'동일가치노동·동일임금'** 원칙을 적용

-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·안전 등 **'사용사유 제한 제도'**를 도입

* 상시·지속, 생명·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,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등

- 기업의 비정규직 **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**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**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** 도입 검토

- 다만, 사용사유 제한,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**실태조사** 등을 통해 **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**으로 추진

○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**세액공제 적용기한**('17년말 일몰도래) **연장**(조특법 개정안 반영, 8월)

* (현행)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 700만원, 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

○ **고용보험 미가입** 사업주·근로자의 **자진신고** 기간 운영(7월)

* 근로자 가입신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허용(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), 미가입 사업주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

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□ **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**

○ **최저임금위원회**를 조속히 **정상화**

○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**영세자영업자·중소기업** 등의 **부담 완화**를 위한 **지원 방안** 마련(6월)

- ①**카드 우대수수료율** 적용대상 확대*, ②**근로소득 증대세제** 지원 강화**, ③**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** 확대***, ④최저임금 인상 등 **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·협의대상**에 포함

* 매출액 기준 영세가맹 2→3억원, 중소가맹 3→5억원 이하(여전법시행령 개정, 8월 시행)
** (현행)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%(대기업 5%) 세액공제
*** 소상공인정책자금(융자, '17년) : 16,250억원, 지신보 보증잔액('17년) : 17.0조원

○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**공공입찰시 감점 부여** 등 시행(7월), **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**(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, 8월)

- **최저임금 전담 감독관**을 신설하고 **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** (기초고용질서 미준수 행위 전반) 실시

□ 주당 법정 **근로시간을** 68→52시간으로 **단축**

○ 국회에 계류중인 **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**를 추진하되, 여의치 않은 경우 **고용부 행정해석 폐기** 추진

○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**종합 지원방안*** **마련**(6월)

* (예시)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,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



**별 첨** 「일자리 100일 플랜」 13대 과제

| | 과 제 | 공약 내용 및 추가·보완과제 |
|---|---|---|
| ① | **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** | ▸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수석실 설치<br>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(5.24) |
| ② | **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** | 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마련(7월)<br>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마련(6월)<br>▸ 일자리창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세제지원 재설계(8월)<br>▸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단계적 도입<br>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(추경안 반영)<br>▸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(6월초) |
| ③ | **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** | ▸ '17년 하반기 공무원 1.2만명 추가 채용(연내)<br>▸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(추경안 반영)<br>▸ 향후 5년간 「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」 수립(6월)<br>▸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」 마련(8월)<br>▸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(8월)<br>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8월) |
| ④ | **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** | ▸ 영세자영업자, 中企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(6월)<br>▸ 최저임금 위반시 공공입찰 감점부여 시행(7월)<br>▸ 최저임금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(8월)<br>▸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|
| ⑤ | **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** | ▸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<br>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예상 기업 지원방안 마련(6월) |
| ⑥ | **중소기업 구인난·청년 구직난 해소** | ▸ 청년구직수당 신설(추경안 반영)<br>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(추경안 반영)<br>▸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(7월) |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01 16:07:38

| | 과 제 | 공약 내용 및 추가 · 보완과제 |
|---|---|---|
| ⑦ | **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** | 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(정기 국회)<br>▸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마련(8월)<br>▸ 중소 · 창업기업 금융 ·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(8월)<br>* 중소기업 · 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, 창업금융 3종 세트 도입(9월 시행),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|
| ⑧ | **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** | 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<br>▸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마련 |
| ⑨ | **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** | ▸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(8월)<br>▸ 개인(대표자)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(8월)<br>▸ 3000억원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(8월~)<br>▸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재개 · 취업시 소액체납액 면제(8월) |
| ⑩ | **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** | ▸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[illegible]련(8월)<br>▸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[illegible]<br>▸ 산업 · 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(8월)<br>▸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이전인원에 따라 세제지원 강화(8월) |
| ⑪ | **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** | ▸ 육아휴직 급여 인상(추경안 반영)<br>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 마련<br>▸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(8월)<br>▸「근무혁신 10대 제안」실천 범국민 캠페인 실시 |
| ⑫ | **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** | 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(추경안 반영)<br>▸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(7월) |
| ⑬ | **사회적 경제 육성** | 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(8월)<br>▸ 사회적경제법안 정부대안 제출 검토(8월) |

Minist
Indus